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훼손하면 안 돼

민주적 입법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일부 정치권 반대로 수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반대 논리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정 속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끝난 내용들이다.

모든 국가적 시책은 부정과 긍정적 파급효과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일부 부정적인 영향만을 근거로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행정부처 이전만으로 50만 명의 도시가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자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행정도시의 건설은 처음부터 행정부처와 함께 국가중추기능을 하는 문화, 교육, 연구개발, 과학기술 및 국제 업무기능 등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로 건설되기 바란다면 정부부처의 이전과 함께 인구흡입력이 큰 과학기술벨트, 국립대학캠퍼스의 이전 등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교육 및 문화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에 와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훼손하면 135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서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추진도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대 혼란과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백해무익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 논란, 지금 당장 거두어들이는 것이 상책이다.

[세계일보 9월 16일자 29면]